

#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평가

이민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민주노총의 99년 상반기 투쟁은 정리하고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격을 가하지 못한 채 계속 밀리다가는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 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속에 시작되었다. 특히 98년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이 무산되고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 성과 없이 표류하면서 민주노총의 99년 상반기 투쟁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노정협상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1.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2~3월 투쟁을 배치한다는 99년 상반기 투쟁계획은 현대·기아자동차노조의 공동투쟁이 무산되면서 처음부터 혼선을 겪게 되었다. 이후 투쟁시기를 언제로 집중할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이다가, 4월 7일 중앙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파업투쟁을 결정했다. 4월 19일 시작된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은 10년 동안 깨지 못했던 '마(魔)의 7일'을 돌파하고 완강하게 전개되면서 전체 전선으로 확대되려 했으나, 한국통신노조의 파업 철회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현장복귀로 급격하게 수그러들고 만다.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은 5월 12일 금속연맹 1만 조합원의 2박3일에 걸친 상경노숙투쟁을 고비로 하여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에도 병원연맹과 금속연맹의 상당수 대오가 계속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처럼 투쟁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을 전환시킨 것은 진영구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공작 범언이었다.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단

식농성,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동조 단식 농성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던 민주노총은 구속·수배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 공안대책협의회 의제에서 노동문제 제외, 특별검사제 실시 등의 약속을 받고 단식농성을 접게 되었고, 6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양노총 위원장의 면담을 끝으로 상반기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 2. 상반기 투쟁 평가

### 1) 성과와 한계

작년과 달리 99년 상반기 투쟁에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투쟁 동력과 의지, 그리고 협신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일간 힘찬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금속연맹이 진행한 5월 중순 2박3일 상경노숙투쟁은 기업 차원을 뛰어넘는 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 각 연맹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투쟁대오를 형성·집중하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임금·단협에서 작년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구조조정에서도 애초의 안을 후퇴시키고 노동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관찰했다. 특히 6월에 터진 진행구 '폭탄주' 사건은 웃 로비 사건과 함께 탄압 위주의 노동정책을 어느 정도 후퇴시켰다.

그러나 상반기 투쟁은 정부의 정체기 조를 바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정협상 요구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제3기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목표로 한국 노총과는 협상을 하면서도 민주노총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 등 민주노총 배제 전술을 구사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하여 많은 조직에서 구속·수배자와 해고자가 발생하는 등 조직력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 2) 투쟁 방향과 시기에 대하여

이번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의 방향은 개별 연맹 차원의 요구를 집약한 공동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요구를 내건 전국동시 총파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4월 19일 총파업에 참여한 것은 서울지하철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대오가 대부분이었고, 5월 12일 투쟁의 경우에는 금속연맹 대오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4월 7일 중앙위원회는 4월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하면서, 금속연맹과 기타 연맹은 5월 중순에야 파업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내건 전국적 총파업이지만, 실제로는 개별 연맹의 동력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는 투쟁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면 원래 투쟁 방향과 실제 진행의 괴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실제로 이번 투쟁의 동력은 구조조정 해당 사업장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부문이 중

심이었다. 구조조정 해당 노조는 지난 1년간 정부와 자본의 무자비한 정리하고, 구조조정에 개별 연맹 차원의 투쟁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투쟁 전선 구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아·현대 공대위가 3월 12일 기아자동차노조의 임정 합의와 노사화합 선언, 3월 25일 현대자동차노조의 시한부 파업 유보로 무너지면서 공동투쟁의 한 축인 금속연맹의 투쟁대오가 흐트러졌고, 자연히 금속연맹은 임단투와 구조조정 사업장을 결합한다는 명분 아래 5월로 투쟁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시기조정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시기를 늦추더라도 다른 조직들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4월 19일 투쟁에 돌입하였다. 4월은 공공연맹, 5월은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4월 말 5월 초 사이 2주 동안의 공백을 무슨 동력으로 메울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 노조의 투쟁을 5월 중순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였으나, 결국 4월 25일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유보와 26일 서울지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재벌개혁 등 노조의 핵심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보다는, (전체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의 고용보장에만 중심을 두는 활동과 투쟁으로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폭넓은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조합원의 고용안정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철노조의 현장복귀로 이어지고 만다.

민주노총의 상반기투쟁은 그 요구는 구조조정정책의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계급 전체의 것이었지만 그 동력은 주로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모순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총파업이라는 축면만 강조하여 투쟁시기 통일에 집착할 경우 무

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기한 4대 요구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앙 차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투쟁의 경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4대 요구 쟁취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울였어야 했다.

### 3) 요구안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99년 상반기 4대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

## 해고 중단

-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사회안전망 구축
- 임금·단협 안정과 산업별 교섭체계 보장

그러나 상반기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는 부각되지 못했다. 이는 정리해고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노조 투쟁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나름의 대안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고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이기주의집단”, “반대하고

저항만 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보수언론의 악선전뿐만 아니라 전국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의 정체·선전활동의 빙관도 여기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제법 개혁 등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보다는, (전체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의 고용보장에만 중심을 두는 활동과 투쟁으로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폭넓은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조합원의 고용안정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 4) 투쟁전술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은 전술운용,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의 방향은 개별 연맹 차원의 요구를 집약한 공동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요구를 나건 전국동시 총파업으로 향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

그 가운데서도 교섭과 투쟁의 결합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투쟁전술을 수립할 때는 내부 역량과 외부 조건, 그리고 상대와의 힘 관계를 냉철히 계산해야 한다. 나아가 진행 과정에서 투쟁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배치하고, 이를 통해 조직력을 확대·강화하는

데 (사정이 어려우면 조직력을 유지하는 데) 전술 수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주관적인 바램과 의지에 기대어 외부의 조건과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작년처럼 '총파업'이나 '전면 투쟁'을 남발하는 모험주의의 오류를 범했다.

#### 모험주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4월 초·중순에는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파업대오가 확대되고 있었으나, 금속연맹이나 한국통신 등으로 투쟁이 확산되지 못했고, 산별연맹 및 단위노조 간에 조직력 편차도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정부측 협상팀 자격요건을 이유로 스스로 요구해 온 노정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은 전술적 성과를 획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조직력을 보존하기 위해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단위

민주노총은 주관적인 바램과 의지에 기대어 외부의 조건과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작년처럼 '총파업'이나 '전면 투쟁'을 남발하는 모험주의의 오류를 범했다.

노조 차원의 투쟁에서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한번에 생취하려 하기보다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5월에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하는 식으로 전술을 구사했어야 했다.

한편 조합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에 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투쟁 준비, 올바른 전략전술 개발과 배치, 그리고 현장과의 결합 등을 적절하게 이루어내지 못했다. 투쟁은 지도부의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투쟁의 성공은 철저하게 준비된 교육·훈련·조직화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은 '선언' 이상의 실질적 준비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 지그재그

모험주의는 객관적 조건과 상황이 원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강경과 온건 사이를 '지그재그' 하다 타협주의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투쟁과 협상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고 어느 한편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한 쪽이 무너질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지그재그를 거듭하다 타협주의로 기운 대표

적인 사례는 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협조하겠다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 이번에도 민주노총은 5월 15일 이후 투쟁이 되조기인 접어들자 노정교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편향을 드러내었다. 투쟁력이 끊긴 상태에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민주노총의 '지그재그'는 진행구 사건에서도 계속되었다. 민주노총이 남발해왔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은 (정작 그 시늉이라도 필요했던 시기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단식과 철야농성이라는 지도부만의 투쟁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구체적 성과 없이 대통령의 '립서비스'만 믿고 상반기 투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 낡은 전술

5월 12일 금속연맹 상경대오를 주축으로 한 대중시위와 행진은 경찰과 과도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정부가 물리적 봉쇄나 인도만의 행진을 고집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차도행진을 허용하고 비무장경찰을 배치하는 등 새로운 대응 전술을 구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물리적 충돌과 육박전 위주의 전술에 머물렀다. 이는 결국 금속연맹 지도부에 영향이 발부되어 활동이 제약되게 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시위행진 전술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수세인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에서 시위행진의 목적은 물리적으로

앞으로 시위 및 행진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민은 민주노총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민주노총

경찰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권과 자본의 잘못을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여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시위 및 행진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한 행진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참가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과 어우러지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 3. 글을 맺으며

99년 7월 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상반기 투쟁평가와 하반기 방침 수립, 지도부 선거를 위한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앞으로 열릴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활동에 대한 염증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지도력과 조직력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2기 지도부가 출범 때 제기한 '민주노총 혁신'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는 지난 10년간 운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민주노총의 발전 방향과 중장기 방침을 마련해

**'내용'이 문제인 상황에서 '형식'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직선제가 안돼서 문제"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지난 10년간 견지해온 자주성·민주성·전투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나아가 변화된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과제와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한 방법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성과에 근거하여 단위노조-산별연맹-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중적인 토론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내용'이 문제인 상황에서 '형식'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직선제가 안돼서 문제"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여전히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 세력화, 민주노총 혁신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산별노조 건설을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계획과 방침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산별연맹들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활동을 이미 진행

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차원의 계획과 방침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이냐 민주노총 강화냐'라는 소모적인 논의구도를 뛰어넘어 '민주노총이 앞장서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보다 큰 방향에서 논의와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곧 '산별노조 반동문자'이고 민주노총의 전국 투쟁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발상법을 넘어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대중적 논의와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역동성과 현장성 위에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은 민주노총의 역할과 위상, 전국중앙조직으로서 지위를 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단순히 기업별 노조를 합치는 일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라는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②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결합한 가운데 진보정당 건설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주노총 차원의 참여와 실천은 미약한 편이다. 과거 진보정당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

민주노총 새 지도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여전히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총 혁신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은 단식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향후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과 정당은 서로 독자성을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결합과 연대관계를 수립하고, 서로 지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가 정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해야 한다거나 정당이 노조를 자신이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 등은 극복되어야 한다.

### ③ 민주노총,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을 혁신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혁신은 단위노조·산별연맹·지역본부·중앙 등 각급 단위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로 정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업집행 체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의제에 기초한 체계와 조직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50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전국중앙조직과 단위노조의 운영원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새 지도부는 하루 빨리 조직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현장토론에 불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대중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조직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문제는 각급 조직 단위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일반 조합원의 대중적 논의가 상충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반영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솔직하게 토론하지 못하는 문제, 앞장서서 책임지기보다는 서로의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 자세 따위가 노동조합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그룹 별로 여러 주장이 난무하지만, 그것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소개되거나 그들 속에서 대중적으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새 지도부는 하루 빨리 조직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현장토론에 불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대중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조직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